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

민주 이성운 의원, 서울고등법원 국감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은 새만금지역 340만㎡ 부지에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국제사업이다. 공항은 당초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후 지난달 11일,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같은달 22일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성운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겼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북에는 군산군공항 외에



마땅한 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려면 청주·김해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전주를 제외한 전북 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짚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전북권 공항 건설이 마지막 보루임을 역설했다.

또한, 1심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을 지역균형 발전 공익보다 우위로 판단한 점을 꼽으며, 그간 전북이 국가사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례들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정 이래 총 176조원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

북은 대광법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톨도 지원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준비한 국제행사 잼버리 실패 책임을 오로지 전북에 돌려 도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시를 들었다.

나아가 이성운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 1곳이 추가되는 것 이상으로, 전북에도 드디어 온전히 도민을 위한 공항이 생긴다는 희망과 용기를 도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건설로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전북도민 한 명 한 명에게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항소심이 고려해야 할 또다른 공익”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지역균형 발전, 생태계 보호 등의 공익 외에 전북도민들의 간절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 속도’... 민주당 “시범사업지 순창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사무처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순창군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

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도당은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북형 기본소득 실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희망의 불씨

를 지닌 순창군민과 순창군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가세요!

추가로

농업인 요건

- 약정채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전농지역 농지

지원내용

-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률
-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지급상한 연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정착형으로 전환해야”

“청년 지역 정착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도 소통 문제 등 지적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국주영은 의원, “청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

국주영은 의원(전주2)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예비 청년농의 역량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별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처럼, 지역이 주도하여 청년의 정착부터 농지 확보,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복 의원 “전북자치도 소통 부재가 전북 발전 ‘발목’”

정종복 의원(전주3)은 “올림픽 유치, 새만금 공항, 원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은 도민과 행정간의 단절된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북의 대형 현안은 정부·정치권·도의회·시군·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와 공론 플랫폼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도는 올림픽 유치 계획의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현실적 보완책과 국제 기준 충족 방안을



국주영은 의원



정종복 의원



최형열 의원

앞에 사죄하라”

권요안 의원(완주2)이 20일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 투표에서 완주·전주 통합



권요안 의원



진형식 의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사할 다해야”

최형열 의원(전주5)은 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전북도정이 원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 “원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부결 시, 김 지사는 도민

▲진형식 의원, “정부 확대→도교육청 감축, 유아 무상교육 역행 안 돼”

진형식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은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원 지출을 승인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11만원을 추가 지원하자, 전북 교육청이 오히려 자체비인 도비 16만5,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소규모 무인점포 소방안전 관리 강화 법령 개정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점포와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무인점포가 소규모로 창업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법을 개정안을 마련·시행할 것 △무인점포 관련 명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세분화된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농·수·산 단위조합 연체율 갈수록 심각”

민주 윤준병 의원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연체율 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업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적자 수준이 작년과 같거나 작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9월 기준 각 조합별 대출잔액을 보면, 농업중앙회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67조2,095억원, 수협중앙회 단위



조합은 34조9,916억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은 9조2,595억원으로, 2022년 대비 농업 9.2%(31조 214억원), 수협 6.0%(1조 9,663억원), 산림조합

15.9%가 각각 증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던 농업·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농업중앙회 5.07%, 수협중앙회 8.11%, 산림조합중앙회 7.46%로 급속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수협·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호 기자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취소율 59%”

민주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분할납부 신청·승인을 받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세대의 비율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비율은 35.9%로 2020년 28.6% 대비 7.3%p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체납 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거나,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횟수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다.

/이만호 기자